국 무 조 정 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사용 배포 2026. 5. 27.(수)

범정부 보이스피싱TF, 7개월 연속 피해 감소 성과…"신종 스캠범죄 대응에 총력"

- 지난해 8.28 종합대책 이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피해액 동반 하락 계속
- 풍선효과로 계속되는 메신저·SNS 기반 '신종 스캠범죄' 맞춤형 대책 논의

□ 정부는 5.27.(수) 16:00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TF」 대응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 성과와 보완 사항**을 점검하고 **신종 스캠범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일시·장소)** '26. 5. 27.(수), 16:00~18:00, 정부서울청사
▸ **(참석)** 국무조정실장(주재), 과기정통부, 법무부, 문체부, 금융위원회, 방미통위, 개인정보위,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 그간 정부는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25년 8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범죄 이용 전화번호 긴급 차단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 AI 플랫폼 구축** 등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총력 대응**해 왔다.

○ 그 결과, '25년 9월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은 **'25년 10월 이후 '26년 4월까지 7개월* 연속 발생 건수와 피해액 모두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25.10~'26.4 전년 동기간 대비 발생 14,461건→9,353건**(35.3%↓)**, 피해액 7,632억→4,936억원**(35.3%↓)**

구분		'25.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6.1월	2월	3월	4월
발생건수(건)		2,390	2,086	1,985	2,368	2,058	1,981	1,226	1,616	1,772	1,494	579	1,349	1,317
	전년 동기간	1,780	1,639	1,618	1,682	1,709	1,203	1,825	2,205	2,163	1,952	1,632	2,294	2,390
	증감률	34.3%	27.3%	22.7%	40.8%	20.4%	64.7%	-32.8%	-26.7%	-18.1%	-23.5%	-64.5%	-41.2%	-44.9%
피해액(억원)		1,145	1,073	1,087	1,345	1,090	1,011	699	764	1,248	797	362	543	523
	전년 동기간	530	623	679	667	716	548	907	1,176	1,288	1,147	740	1,229	1,145
	증감률	116.0%	72.2%	60.1%	101.6%	52.2%	84.5%	-22.9%	-35.0%	-3.1%	-30.5%	-51.1%	-55.8%	-54.3%

□ 다만, 정부가 **보이스피싱 수단인 전화·문자 등을 집중 단속하자 일종의 풍선효과로** SNS·메신저를 이용한 **신종 스캠범죄**(로맨스 스캠·투자리딩방·팀미션 등)**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날 회의에서는 **신종 스캠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도 집중 논의**되었다.

○ 다음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이다.**

1 8.28. 종합대책 성과

□ 정부는 **지난해 8.28.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부처간 칸막이를 낮추고, **보이스피싱 범죄 全주기*에 따라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대응 체계를 갖추어 대응**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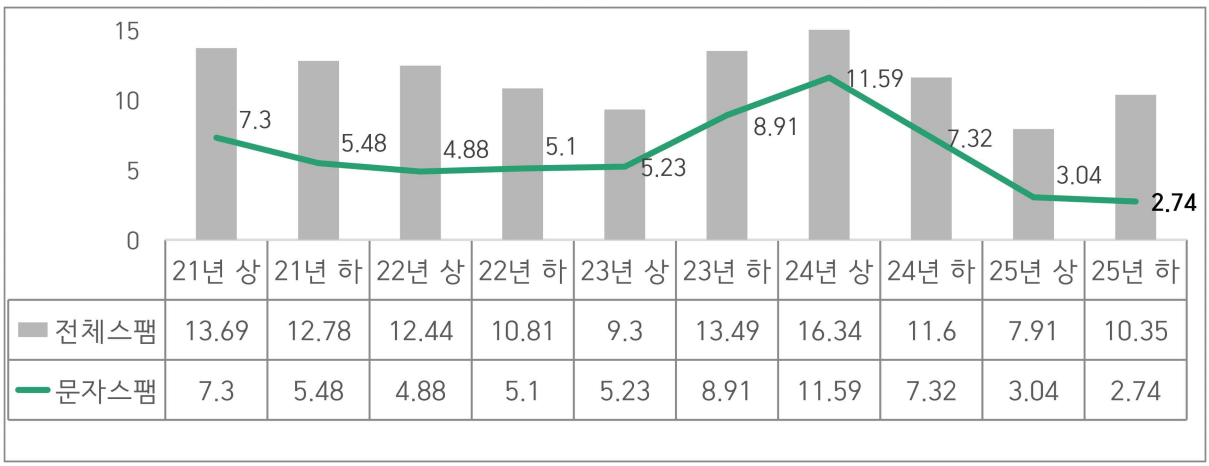
* 피해자에 대한 접근단계 → 기망단계 → 자금 편취단계 → 피의자 검거·수사단계

【① 피해자에 대한 접근단계】

□ 정부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범죄조직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악성(미끼) 문자·전화·악성 앱 설치 등을 차단하고 **피싱 이용 전화번호를 긴급하게 정지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왔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대응 정책과 민관협업을 통해 **최근 5년내 최저 수준의 문자스팸**(2.74통, 전년比 62.6%↓) 성과를 달성했다.

< 연도별 스팸 수신량 현황(단위 : 통) >



	21년 상	21년 하	22년 상	22년 하	23년 상	23년 하	24년 상	24년 하	25년 상	25년 하
전체스팸	13.69	12.78	12.44	10.81	9.3	13.49	16.34	11.6	7.91	10.35
문자스팸	7.3	5.48	4.88	5.1	5.23	8.91	11.59	7.32	3.04	2.74

○ **과기정통부**는 삼성 단말기 및 통신3사의 전화 앱에서 **통화 내용을 실시간 분석,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탐지**하는 기능을 기본 제공(opt-out 방식)하도록 하였고

- **구글 안드로이드폰**에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인 EFP(Enhanced Fraud Protection)을 적용하여 **악성 앱 설치를 실시간으로 차단**하고 있다.

○ **경찰청**은 2025년 11월 **'피싱 전화번호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하여 **피싱 이용 의심 전화번호를 10분 이내에 차단**하고 있다.

- 긴급차단은 ▵삼성 스마트폰 간편 제보 ▵112신고 ▵1394(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 등을 통해 접수하고 있고, **올해 4월까지 총 65,638개 회선을 긴급 차단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 ② 기망단계 】

○ **과기정통부**는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번호로 둔갑시켜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발신번호 변작기(심박스 등)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5월 19일부터 시행** 중이고,

- 시중에 대포폰이 쉽게 개통·유통되지 않도록 **휴대전화 부정개통과 관련된 통신사업자의 대리점·판매점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오는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개인정보위**는 **보이스피싱 예방·탐지에 실제 보이스피싱 용의자의 목소리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를 적용**하여,

- 이를 통해 현재 **이동통신3사는 AI가 통화를 실시간 분석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탐지·경고해주는 기능**을 상용화시켜 제공하고 있다.

※ KT 후후앱('25.7.), LGU+ 익시오앱('25.12..), SKT 에이닷앱('26.2.) 출시 / 탐지 정확도 97% 이상

【 ③ 자금 편취단계 】

○ **금융위원회**는 범죄피해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금융사의 탐지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AI플랫폼**을 출범('25.10.29)해 5개월간('25.10월~'26.3월) **26만 6천여건의 정보 공유**를 통해 **약 419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였고,

- 그동안 범죄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가상자산 계정 활용 범죄도 관련 법**(통신피해환급법) **개정**을 통해 **10월부터는 범죄 이용계정 차단 등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 ④ 피의자 검거·수사단계 】

□ 정부는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캄보디아 등 해외 스캠단지를 원점 타격**하는 등 범죄단체 검거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 **경찰청**은 **2025년 9월부터 '피싱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올해 4월까지 **피싱범죄 피의자 26,406명을 검거**(전년 동기比 26.7%↑)**하였고,**

- 2026년 1월~4월동안 **스캠 범죄 510건에 대하여 407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였다.

- 또한, **캄보디아 국외도피사범 137명을** 2차례에 걸쳐 **전세기로 송환**했으며, 인근 국가로의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캄보디아 외 주요국에서도 스캠조직원 288명을 검거, 151명을 송환**했다.

※ 보이스피싱 등 스캠 범죄 관련 범죄수익 보전 통계는 '26년부터 관리 중

○ **법무부**는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이더라도 **다수 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형법을 개정하였고,

-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피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국가가 '필요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고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재산몰수법을 개정하였다.

○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조직 및 주요 조직원 **집중 수사와 국제공조를 강화**한 결과,

- '25.9.~'26.4.동안 **총 246명을 입건하고, 이 중 132명을 구속**하는 등 종전보다 **구속수사 비율을 높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고,

- 해외거점 조직 대상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해외도피사범 검거·송환 인원이 지속 증가**, 특히 종합대책 발표 이후 **총 8명을 검거·송환하는 등 해외거점 조직을 원점 타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② 종합대책 보완사항

□ 각 부처에서는 8.28. 종합대책을 지속 이행하며 **보이스피싱 예방·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 먼저, **금융위원회는** 범죄예방 및 재범 등을 막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실형을 받은 자의 전자금융거래**(비대면 계좌개설·인터넷뱅킹 등)를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금융감독원 간 정보공유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는 **외국인의 휴대전화 부정개통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외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에 대해 이름 등 기존의 텍스트 정보(이름 등) 진위 확인에서 나아가, **사진 정보에 대한 진위 여부도 확인한다.**

○ **법무부·대검찰청**은 각급 청에 설치된 공익대표 전담팀을 중심으로 **대포통장 개설 등 범죄 목적 유령법인에 대한 법인해산을 활성화**하여 법인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 특히,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전담 부서가 설치된 서울동부지검에 범죄수익환수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보이스피싱 수사-범죄수익환수-피해재산환부' 논스톱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경찰청**은 자칫 흩어지기 쉬운 보이스피싱 예방·홍보 메시지를 하나로 결집하고자 **지난 3월 8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피싱 예방·홍보 협의체'를 구성**해 최신 범행 수법을 전파하고 기관별 홍보 채널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 각 부처별 '보이스피싱 예방 관련 홍보콘텐츠 URL'(붙임 참고)

○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불법유통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기반으로 악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출된 개인정보를 구매·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

□ 또한, 8.28 종합대책의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기 위해 **대책 관련 11개 입법과제 중 7개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 처리**된 가운데,

* ▵ 범죄의심정보 공유 ▵ 가상자산 지급정지 ▵ 이동통신사 불법개통 관리감독 의무 강화 ▵ 사설중계기 금지 ▵ 사기죄 법정형 상향 ▵ 범죄수익 환수강화 등(붙임 참고)

○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과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법 개정 전이라도 행정적 조치와 민간협력을 통해 정책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 금융기관 무과실 책임제 도입 및 보안인력·시설확충 ▵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 공익목적 개인정보 원본 활용 특례 신설

- 먼저,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일부 금융회사에서 운영 중인 "보이스피싱 피해보상 보험 무료가입 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활성화하는 한편 **지원 규모와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고,

※ 국민·농협·신한·기업·하나·우리·전북은행 등 총 7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보상보험 서비스 운영중(300~1,100만원 수준에서 보상 / 은행별 상이)

-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원본활용 특례 신설 전**이라도 ▲사전적정성 검토제*, ▲규제 샌드박스 등 기존의 혁신지원 제도를 통해 AI 기반 **피싱 예방기술 개발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공유 및 활용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신서비스 기획·개발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방안**을 **개인정보위**와 **함께 마련**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 **사후**에 **불이익한 처분**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

3 신종 스캠범죄 대응 방안

□ 정부는 그간 보이스피싱 범행 수단 차단 등 대응으로 인해, **범죄단체가 SNS나 메신저를 활용한 신종 수법으로 수단을 다변화**하고 있어 **관련 대응 방안도 논의**하였다.

○ **경찰청**은 **신종 스캠범죄에 대한 포괄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 **네이버(2.24.), 카카오(5.6.)와 업무협약**을 맺어 최신 피싱범죄 시나리오를 제공하여 각 사의 이용자 보호 절차에 즉각 반영하고, 이를 통해 **범행 이용 계정 등을 차단**하였다.

- 향후 **더 많은 플랫폼 사업자들과 업무협약**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시스템도 고도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 또한, 공공 조달 계약 정보를 악용한 **노쇼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조달청과 3월 2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조달 업체가 '나라장터' **전자계약 과정에서 사기 피해 예방정보를 숙지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 5월에는 **농협에 발주하려는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등이 계약 체결 시 사기 예방 내용을 필수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농협 공개입찰 시스템(FIRSTePRO)'을 개선**했다.

○ **금융위원회**는 신종스캠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다중피해사기방지법' 개정 전이라도 **경찰청과 협업**하여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등 **신종 스캠범죄에 대해서**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심거래 탐지 및 계좌 거래정지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금융회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동법에 따라 신속하게 임시조치**를 취하는 한편, 경찰의 수사를 통해 **신종 스캠범죄임이 확인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하여 **고객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계좌를 정지**할 수 있게 된다.

* 「특정금융정보법」 상 고객확인 제도(§5의2) : 금융회사가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는 고객의 자금원천, 거래목적을 확인하도록 의무화 → 확인완료 전에는 금융거래를 거절(중단)하도록 해석

○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에 **신종스캠 대응 관련 업무지침을 배포하여 정기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며, 아울러 범죄와 연관되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계좌정지 과정을 검토하여 범죄 이용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거나 거래정지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거래정지를 해제**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또한 경찰청은 **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선의의 계좌 명의인에 대해서는 거래정지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제**할 예정이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회의를 마치며, 그간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줄지 않을것만 같았던 보이스피싱도 감소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 기존 대책의 보완점과 신종 스캠범죄에 대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고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지금보다 더욱 신경써주기를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총괄>	국무조정실 행정관리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부선 (044-200-2082)
		담당자	경 정	이은일 (044-200-2083)
		담당자	경 위	조승훈 (044-200-2094)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책임자	과 장	김준모 (044-202-6650)
		담당자	사무관	김동현 (044-202-6651)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영호 (044-203-2911)
		담당자	사무관	김지민 (044-203-2915)
담당 부서	법무부 형사기획과	책임자	과 장	조재철 (02-2110-3269)
		담당자	검 사	김진규 (02-2110-3544)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책임자	과 장	김태훈 (02-2100-2970)
		담당자	사무관	이다행 (02-2100-2975)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책임자	서기관	정태호 (02-2100-1730)
		담당자	사무관	남고운 (02-2100-1817)
담당 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책임자	과 장	심아미 (02-2110-1520)
		담당자	사무관	이명심 (02-2110-1522)
담당 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책임자	사무관	정진아 (02-2100-3073)
		담당자	사무관	최주은 (02-2100-3072)
담당 부서	대검찰청 조직범죄과	책임자	과 장	윤국권 (02-3480-2280)
		담당자	계 장	김수정 (02-3480-2284)
담당 부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책임자	총 경	박재흥 (02-3150-2915)
		담당자	경 정	박상현 (02-3150-0384)
담당 부서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	책임자	국 장	이정만 (02-3145-8150)
		담당자	팀 장	정윤미 (02-3145-813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입법과제 개정 전후 비교**

법안명	과제명	개정 전	개정 후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 ('26.8.4. 시행 예정)	○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및 계좌 등을 발견하더라도 개별회사 차원의 대응만 가능	○ 금융·통신·수사분야의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정보 등을 공유하여 선제적 범죄 대응
	가상자산 사각지대 해소 ('26.10.1. 시행 예정)	○ 금융회사와 달리 보이스피싱 계정차단 근거가 없어 범죄 사각지대로 악용	○ 가상자산거래소를 규율 대상에 포함
전기통신 사업법	이통사 의무 강화 ('26.10.1. 시행 예정)	○ 휴대전화 부정 개통 時 우선 시정명령 → 미이행시 과태료 및 등록취소·영업정지	○ 휴대전화 부정 개통 時 시정명령 없이 등록취소·영업정지 가능(one strike-out) → 부정 개통 감소 기대
	대포폰 개통 방지 ('26.5.19. 시행)	○ 해외 번호를 국내 번호(010, 국가·공공기관 등)로 거짓표시(변작) 하는 서비스만 금지	○ 변작 서비스 뿐만 아니라 발신번호 변작기(심박스 등)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까지 금지하여 번호 변작 감소 기대
	휴대폰 개통시 대포폰 불법성 고지 ('26.10.1. 시행 예정)	○ 이용자가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해 대포폰을 유통, 선량한 국민의 범죄 연루	○ 이용자에게 휴대폰 개통 시 대포폰의 불법성, 범죄 악용 위험성을 고지하도록 이통사에 의무를 부여 → 선량한 국민의 범죄 연루 감소 기대
정보통신망법	불법스팸 차단 체계 구축 ('26.10.1. 시행 예정)	○ 불법스팸 관련 제재수준이 낮아 불법스팸이 근절되지 않는 한계 ▸ (불법스팸) 3천만원↓ 과태료 ▸ (악성스패머)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 불법스팸 관련 부당이익 환수체계 구축 ▸ (불법스팸)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 ▸ (악성스패머)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 관련 범죄수익 몰수·추징
형법	사기죄 법정형 상향 ('25.12.23. 시행)	○ 서민 대상 대규모 재산범죄의 피해중대성에 비해 낮은 법정형으로 엄정 대응 한계	○ 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처벌 강화 ▸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 가능
부패재산 몰수법	범죄수익 환수 강화 ('26.6.17. 시행 예정)	○ 사건·법원에 따라 피해자의 범죄수익 환부 가능 여부가 달라지고 범죄수익임이 의심되더라도 환수하지 못했던 한계	○ 특정사기범죄의 범죄피해재산 확보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보이스피싱 등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필요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하여 피해자에게 환부 ▸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에 상당한 개연성 있는 경우 범죄수익으로 추정

붙임 2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주요 성과

구분		주요 내용
접근 단계	경찰청	• 피싱범죄 이용 **전화번호 65,638개 긴급차단**(11.24.~4.30.) ※ 오인 차단율 1.2%
	방미통위	• 1인당 월평균 스팸문자 수신 **7.32통('24.下) → 2.74통('25.下) 62.6%↓.** ※ 최근 5년 내 최저
기망 단계	과기부	• 구글과 협업, **全안드로이드 단말기에 악성앱 차단 프로그램 적용**('25.11.) • 삼성·통신3사 기기에서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 기본 활성화**(opt-out)
	개보위	• 통신3사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에 실제 피의자 목소리 정보** 제공 ⇨ 통신3사 모두 **탐지 정확도 97% 이상**
편취 단계	금융위	•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 공유 **AI플랫폼 출범, 26.6만건 정보공유** ⇨ **4,821건 지급정지 및 419.1억원 피해 예방**('25.10.~'26.3.)
수사 단계	경찰청	• 피싱사기수사대 신설 등 **전담인력 1,363명 운용,** 특별단속 추진('25.9.1.~) ⇨ △**피싱범죄 26,406명**(전년 동기比 26.7%↑) △**범행수단 생성·공급 11,788명 검거** • 보이스피싱 등 스캠 범죄 **510건·407억 원 상당 기소 전 몰수 보전**('26.1~4.) •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스캠조직원 등 총 458명 검거** ⇨ **<캄보디아> 170명 검거·137명 송환**('25.12.~'26.4.) / **<이외 국가> 범죄자 288명 검거·151명 송환**('25.9.1.~'26.5.13.)
	대검찰청	• 종합대책 이후 **동남아 거점 범죄조직 246명 입건·132명 구속**(**구속비율 53.6%**) ※ 종합대책 전 구속비율 35.9%에서 상승

붙임 3 부처별 주요 보이스피싱 홍보 링크

부처	이름	링크
대검찰청	대검찰청 찐센터	http://pf.kakao.com/_kpjPn
경찰청	피싱안심SOS	https://www.counterscam112.go.kr
방미통위	불법스팸대응센터	https://spam.kisa.or.kr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https://www.fss.or.kr/fss/main/sub1voice.do?menuNo=200012